

속전속결 국무회의 의결에 “14만 전체 경찰회의” 반발

경찰국 신설 갈등 최고조

윤 대통령 “중대한 국기 문란”

신설 반대 청원 15만명 넘어서

이상민 장관 “경찰대 개혁도 추진”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조직 간 대립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경찰 내부 반발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폭발’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에 ‘췌기’를 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까지 규정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직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하는 등 양측의 충돌이 견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시간만에 15만명을 넘어서면서 법안 접수 요건이 성립돼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의결=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실제로는 경찰 12명, 일반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정 ▲국가경찰위원회 안전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통제를 놓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되면서 이들 간 갈등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입법 청원 10만명 넘어서=이에 대응해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직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주도한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또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나선 가운데 청원 10시간 만에 목표 인원 10만명을 넘어서 15만 1237명(오후 5시50분 기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국 신설’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공안통치 부활” 대정부 공세 수위 높여=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황의 서한을 흥지만 대통령실 정부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다. 진정 국가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부, 경찰대 개혁도 추진키로=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대는 고위(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명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대 출신들을 지적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합동 수사단 신설 검찰 수사 기능 대폭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윤 대통령 기업 형벌 규정 개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제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과 더불어 추가 합동수사단 신설·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민법·상법 개정과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래 변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정리해 보고를 마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토론회 “문 정부 부동산에 무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땀집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

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노무현-문재인 정부) 무능한 정당”이라며 “진보와 보수 문제의 아니라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언론개혁 실효도 부족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대선 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대통령)을 더 부각할 우려 때문에, 언론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인식된다”면서 “짚은 정책 발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로남불’ 정책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